죽은 자의 몸과 근대성

한국의 전사자 ·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 연구*

노용석
영남대 인류학과 강사

〈논문요약〉

21세기 들어와 한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유해 발굴이 실시되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00년부터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을 기념해 시작된 전사자 유해 발굴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거청산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이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유해 발굴은 한국전쟁이라는 시기와 더불어 발굴의 대상이 비정상적이고 비참한 죽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죽음의 시기와 발굴 대상을 제외한 부분에서 두 가지 유해 발굴은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전사자 유해 발굴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강한 국가보훈적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에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은 '국가에 의한' 죽음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근대 국민국가의 폭력성과 과오를 드러내는 과거청산의 중요한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 전사자 유해 발굴이 근대 국민국가의 강화라는 전통적인 근대성(modernity)과 연관되어, 발굴된 유해를 동일하게 상징화하여 '중앙적'인 국가의례를 강화하는 데 치중한 것이라면,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은 중심성을 강화하기보다는 근대 국민국가가 가지는 다양성과 균열을 표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위의 두 가지 유해 발굴 사례가 근대성을 축으로 하는 대립지점에 놓여 있으며,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의 연구를 통해 한국 사회의 '탈근대'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 본 논문에 대해 좋은 지적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 주요어: 유해 발굴, 전사자, 민간인 학살, 과거청산, 근대 국민국가, 근대성

1. 머리말

2010년 한국 정부는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안 의사의 유해를 조속히 발굴하여 국내로 봉환할 수 있도록 중국 및 일본 등과 외교적 협력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은 2005년 '대한민국 광복 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굴하기로 결정했으며, 2008년 3월 중국 뤼순 감옥 부근에 대한 발굴까지 실시했으나, 유해를 찾지 못했다.[1] 2010년 사업은 이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된 것이었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듯이, 안중근 의사의 영혼을 달래주는 위령과 기념사업(commemoration and consolation)에 방점을 두고 있다. 또한 유해의 발굴을 통해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국가주의의 기틀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즉 죽은 자의 유해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표상으로 승화하는 것이다.

이렇듯 유해를 포함한 죽은 자의 몸에 대한 발굴 및 재매장이 정치적 표상으로 작용하는 사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심심찮게 등장한 것이 사실이다. 1961년 죽음 후 레닌(Vladimir Lenin)의 묘소에서 '추방되어' 재매장된 스탈린(Ioseb Dzhugashvili)의 사례가 그러했고, 1997년 볼리비아에서 발

1) 2005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하지만 실제 2008년 3월 뤼순 감옥 부근에 대한 유해 발굴에는 북한이 불참한 채 남한만이 참여했다.

굴되어 쿠바로 재매장된 체 게바라(Ernesto Guevara de la Serna) 시체의 이동도 커다란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의 에비타 페론(Evita Perón),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필리핀의 페르디난도 마르코스(Ferdinand Marcos)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특정 인물의 유해가 발굴되어 재매장되는 과정이 특수한 정치적 표상으로 작용한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었다(Verdery 1999, 2).

정치지도자 등의 개별 유해를 떠나 집단적인 유해 발굴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은 사례는 주로 과거청산 과정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아르헨티나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페루, 스페인, 구(舊)유고 연방, 캄보디아, 베트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1984년 이후부터 군사통치위원회의 '더러운 전쟁(dirty war)'[2] 시기 실종된 이들의 유해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다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까지도 이 작업은 진행되고 있다(EAAF 2003; 2006; 2007; Fisher 1989). 유럽 국가인 스페인은 1930년대 프랑코 독재 시절에 학살된 민간인들의 유해를 2001년부터 발굴하기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다(Ferrándiz 2006, 8).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은 1975년 '대미항전'(베트남 전쟁) 종료 이후 공산당과 군부에 의해 '열사(Liet Si)'들에 대한 유해 발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1980년대 말부터는 중부 및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비엑호(Viec Ho)' 즉 '가사운동(家事運動)'이라 칭할 수 있는 죽은 자의 유해 수습 열풍이 발생했다. 이때 가사운동의 주요 유해 수습 대상은 '열사'들이 아니라 전쟁의 승전 속에 잊혀져 있었던 민간인 전쟁 희생자들이었다(권헌익 2003, 40-47). 위와 같은 집단 유해 발굴 사례는 정치지형의 변동에 따라 죽은 자의 처지가 변화했을 때 실시된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국

2) 아르헨티나는 1976년 3월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군사통치위원회(Junta Militar)의 폭압정치로 인해 1976년부터 1983년까지 약 10,000명 이상의 실종자(desaparecidos)와 수천 명의 국외 망명자가 발생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 시기를 일명 '더러운 전쟁'이라 일컫는다.

가주의 및 지배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기도 했다.[3] 두 경우 모두 발굴된 유해는 변동된 사회의 정치적 지평을 대변하는 일종의 표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 한국에서도 안중근 의사와 같은 특정 인물에 대한 유해 발굴과 재매장을 넘어선 집단 유해 발굴이 연달아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2000년부터 시작된 6 · 25전사자 유해 발굴을 비롯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 실미도 전사자 유해 발굴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유해 발굴은 아니지만 일제 강점기 동안 해외로 강제동원되었던 이들의 유해도 간헐적으로 송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발굴을 통해 매년 수백 구의 유해가 새롭게 발굴되어 매장되고 있으며, 일부 유해는 아직까지 올바른 매장 방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와 같은 현상으로 간단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좀 더 복합적인 사회적 맥락과 연결시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21세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 각종 유해 발굴 사례의 등장 배경과 특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특히 근대 국민국가라는 틀을 중심으로 서로 상반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전사자 유해 발굴과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 사례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상호 비교하고, 이를 통해 유해와 관련한 현 한국 사회의 주요 담론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3) 베트남에서 실시된 '열사'들에 대한 유해 발굴 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 유해 발굴의 배경

어떤 이의 시체가 죽음 이후 정상적 의례를 거치지 못한 채 매몰되어 있다면, 많은 이들은 이 유해가 발굴되어 적절한 매장의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흔히 비정상적 죽음(uncommon deaths; Robben 2004, 6) 혹은 비참한 죽음(tragic death; Kwon 2006, 13)이라 칭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정상적 죽음 혹은 비참한 죽음의 사례는 존재하고 있다. 예로부터 통과의례를 마치지 못한 사람의 죽음과 집 밖에서 객사한 죽음, 그리고 죽은 후 후사가 없어 자손으로부터 제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원혼(冤魂)이 발생할 수 있는 죽음이라 하여 비정상적 죽음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죽음을 현실적 측면에서 분류해 보자면, 다양한 경우에서의 실종(disappearance)과 전투 중 행방불명(Missing in Action; MIA), 학살 등의 이유로 인해 주검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한국사회에서는 예로부터 원혼을 달래기 위한 위령 행사가 행해졌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각각 국가차원, 사회차원, 개인차원의 위령제가 진행되고 있다(송현동 2005, 125). 이 중 국가차원의 위령제는 근대국민국가 차원에서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진행하는 '국가의례'로서 국립묘지, 충혼탑, 무명용사묘지, 전사자 묘지 등이 가장 대표적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한국 현대사의 경우 비참한 죽음의 대표적 배경은 한국전쟁 시기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 기간 중 수백만 명의 남북한 군인 및 UN군, 중국군 등이 사망했으며, 이 중 많은 수의 유해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이하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과거청산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군인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전쟁 당시 학살되거나 실종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의 유해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전쟁이 종료된 후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유해

의 발굴에 커다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간헐적으로 지역적 수준에서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을 진행하거나,[4] 소규모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전사자를 발굴한 경우는 있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된 것은 2000년 이후부터였다. 그렇다면 왜 2000년 이후부터 이들에 대한 유해 발굴이 본격화된 것일까?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2000년을 전후한 몇 가지 사회문화적 배경을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작으로 한국전쟁을 거치며 '반공이데올로기'를 강력한 국가지배이데올로기로 삼았다. 특히 해방정국 시기부터 강화되어오던 반공주의는 한국전쟁을 겪은 후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승만과 한민당 등 '극우세력'과 지배세력에 국한되어 있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가 절대다수 국민들의 '수동적 동의' 혹은 '능동적 동의'를 얻어낼 정도로 확산되면서 분단의식이 내재화되었다(손호철 1999, 13). 이러한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은 민주화운동과 진보운동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반공주의 논리는 몇 가지 결정적 사건을 계기로 크게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1980년대 민주화 대투쟁과 1997년 첫 정권교체를 통한 '국민의 정부' 탄생이었다.

특히 국민의 정부 탄생은 한국 사회 정치의 근본적인 측면을 바꿀 수는 없었으나, 이전까지 활성화될 수 없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활성화했는데, 과거청산과 통일논의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6·15 공동선언'이라는 형태로 결실을 맺은 국민의 정부의 통일논의는 실질적으로 통일운동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 내부에 잔존해 있던 강한 반북 이데올로기를 희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들은 막연히 '적'으로만 인식해오던 북한을 '동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으

---

4)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유족회 활동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일차적으로 경상남북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도 몇몇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유해를 수습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의 역사에 대해서는 보다 실증적이고 확대된 연구가 필요하므로 차후 독립된 장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며,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 내 잔존해 있던 냉전과 대결 구도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통일논의와 더불어 권위주의와 군사 독재정권 시절 국가에 의해 자행된 의문사 및 인권유린, 학살 사건 등을 규명하기 위한 과거청산에 대한 시도도 국민의 정부 시기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과거청산 열기는 2000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정부기구로 발족했는데, 특히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국가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가기구로는 거의 처음으로 진실규명을 시도하는 전기를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의문사 및 인권유린 사례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의 전면 조사에 대한 인식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대두에는 1999년 AP통신을 통해 보도된 '노근리 사건'의 공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노근리 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지역적으로 간혹 부각되기만 하던 민간인 학살 사건을 전국적 규모에서 다루는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다. 이때부터 전국의 민간인 피학살 유족들은 1960년 이후 가장 광범위하게 유족회를 재결성했으며, 이후 각계의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노력을 전개했다.

과거청산에 대한 활성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때마침 부각되기 시작한 역사 및 사회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통해 강화되기도 했다. 인류학과 역사학, 사회학 등을 중심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시도에서는 특히 역사인류학적 방법에 있어서의 구술사와 미시사, '로컬리티(locality)'와 '아래로부터의 역사' 관점 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시도의 핵심은 무엇보다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는 기존 관념들, 즉 '중앙성'과 '국가성'으로 대변되는 모더니티(modernity)적 관점에서 벗어나 좀 더 민중적이고 개별의 측면에서 사회를 바라봄으로써 '다수'와 '같음'의 논리보다 '소수'나 '다름'의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해석 경향에서 '소수'나 '다름'의 수많은 사례들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전쟁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연구대상 중의 하나였다.

2000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50주년이 되는 해였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와 냉전(cold war)의 역사를 말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다. 1950년 6월 25일을 기점으로 본격화된 전쟁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까지 지속되었고, 이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오랜 기간 동안 남북한 모두에서 각자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자의 시각으로 본 명확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약 50여 년 동안 남한에서 본 한국전쟁은 '6월 25일 불법적 남침 → 서울 점령 → 낙동간 전투 → 인천상륙작전 → 서울 탈환 및 북진' 등과 같은 틀에 박힌 전개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더 이상 '거시적 전투사'를 중심으로 전쟁을 사고하는 것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히려 그동안 조명을 받지 못하던 로컬리티(박찬승 2000; 윤택림 2003; 이용기 2001; 노용석 2005; 표인주 외 2003 등)적 관점에서의 전쟁 읽기를 시도하고, 여성과 소수자(김성례 1991) 등의 관점에서 바라본 '또 다른' 한국전쟁을 다투어 소개했다.

이렇듯 2000년에 즈음하여 형성된 사회적 담론과 한국전쟁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국가의 '안보와 보훈'을 정책화하는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불과 10년 전인 1990년 6 · 25전쟁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전쟁기념관'의 기공식을 거행했다.[5] 전쟁기념관의 성격은 1997년 발간된 『전쟁기념관 건립사』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쟁기념관 건립 배경이 "체제전복을 꾀하는 좌익세력"을 견제하고 "올바른 호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전쟁기념사업회 1997). 이처럼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전쟁은 호국안보 및 보훈과 연결되어 있었고, 반북 · 반공이데올로기로 특정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200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제50주년이 될 무렵 사회의 많은 부분은 변화해 있었다. 일방적인

5) 전쟁기념관은 1994년 완공되었다.

반북·반공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효율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국전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전투사적인 '전쟁 공식' 이외에 다양한 사례들이 한국전쟁의 표상을 대체했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문제 역시 이러한 대체 표상 가운데 하나였다. 즉 원색적인 용어를 써서 '괴뢰정권'의 흉악성만을 말하면 안보의식의 고취가 이루어지던 것이 더 이상 어려워진 것이다. 결국 정부는 한국전쟁의 바뀐 의미를 수용하면서 계속적으로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고, 그 결과 기획된 것이 전사자 유해 발굴이었다. 50여 년 동안 이름 없는 계곡에 묻혀 있다 발굴된 유해들은 원색적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국민들에게 '호국'과 '안보'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앞서 언급한 과거청산의 열기가 지속되어 진실화해위원회 등이 설립되면서 2007년부터는 정부에 의해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도 실행되기에 이른다. 결국 비참한 죽음으로 동일하게 분류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두 가지 유형의 유해 발굴이 한 시기의 동일한 전환점을 겪으면서 함께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 것이다.

3. 유해 발굴의 과정과 의미

1) 전사자 유해 발굴

6·25전쟁이 끝난 지 55년이 지난 지금 178,000위의 유해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으나 참전 전사자 중 102,000여 위의 호국용사들은 현충탑 내부에 위패만 모셔져 있다. 따라서 시신을 찾지 못한 호국영령의 유해를 발굴·안장 및 추모행사를 통해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고 국가

가 무한 책임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의지를 천명하여 유가족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중략) 참전국의 유해를 발굴하여 관련국에 인도함으로써 정부의 인도적 차원의 노력을 알리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6 · 25 전사자 기념사업회, 1999, 『6 · 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계획』(육군본부 외 2005, 164 재인용))

세계사적으로 볼 때 전사자 유해 발굴은 유럽과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된 전사자 매장문화와 연관을 가진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 유럽 각국에서 시작된 '무명용사의 묘' 열풍은 근대 국민국가주의를 강화하고 국민 개병제에 내재해 있는 민주주의 원칙의 표상으로 여겨졌다. 무명용사의 묘는 묘지에 실제 시신을 묻는 것은 아니지만 '용사'들의 영을 고국으로 모셔와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 있는 국민들에게 자신들도 전사할 경우 이러한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게 된다. 이때 실제 시신은 본국으로 봉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한 장소에 매장했다.[6] 그러나 이러한 매장 문화는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쟁을 치른 후 미국을 중심으로 변화를 일으켰다. 미국은 베트남전쟁 이후 MIA의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권헌익 2004, 185-186). 이를 위해 현재 미국은 JPAC(Joint POW/MIA Accounting Command; 미국 포로 및 실종자 확인 연합사령부)이라는 전문 유해 발굴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JPAC은 일명 '실하이(CILHI, U.S Army Identification Laboratory in Hawaii)' 부대로 불리기도 하는데 1973년부터 현재까지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동서 냉전, 베트남전쟁 등에서 사망한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여 본국으로 송환했으며, 이 가운데 738명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에게 인

6) 예를 들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연합군이 전사했던 태국의 깐짜나부리(Kanchannaburi)에는 현지에 UN군 묘지가 설립되어 있다. 이 묘지에 안장된 유해의 많은 수는 국적과 신원이 확인된 경우였지만, 본국으로 옮겨가지 않았다.

계했다(중앙일보 2007/06/21). JPAC 활동과 그들의 모토인 "Until they are home", "You are not forgotten"에서 나타나듯이, 최근의 전사자 유해 처리는 전사 장소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발굴 후 가족에게 유해를 인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은 전사자 유해 매장 전통을 이어 받아 2000년부터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170,000여 구의 유해를 찾아 나선 것이다. 이 사업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유해라는 특정한 소재를 이용함으로써 '다소 인간적' 측면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7] 국방부는 2000년 한국전쟁 발발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6 · 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전사자 유해 발굴, UN묘지 추모행사, 휴전 50주년 기념행사, 주요 전적지 전투 기념행사, 참전 용사 명예 선양 및 복지시책확대, 호국안보 정신 강화를 위한 전시회 및 각종행사, 참전국과 교류 확대 등을 계획 실시했다. 이러한 사업 가운데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단연 전사자 유해 발굴이었다. 한국의 전사자 유해 발굴의 시작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전쟁을 통한 안보의식 등의 고취를 변화된 사회상에 맞추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러다 보니 처음부터 계속 사업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며, 2000년부터 한시적인 기획사업의 형태로 출발했다.

한국에서 최초의 전사자 유해 발굴은 2000년 4월 낙동강 전선의 격전지였던 경상북도 칠곡의 다부동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부터 2003년 7월까지 6 · 25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유해 발굴은 2003년 7월 계속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2004년 전사자 유해 발굴과가 육군 산하에 설치되면서 전문적인 유해 발굴단을 편성하기에 이른다. 또한 2005년 6월

---

7) 경상북도 칠곡군 다부동 369고지에서 발견된 "최승갑(崔承甲)"의 유해 발굴 사례는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이 사례는 유해 발굴 당시 함께 발견된 삼각자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미망인이 유해를 재회하는 극적인 장면이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에는 전사자 유해 발굴의 영구 추진이 결정되면서 조직 보강 등의 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정부는 2006년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창설 법령을 제정하고, 2007년 1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을 정식으로 창설했다. 유해 발굴 감식단 창설 후 효과적인 유해 발굴을 위해 2008년 1월에 "6 · 25 전사자 유해 등의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8924호)"을 제정했고, 2009년에는 현 국립현충원 내에 신청사를 개관하기에 이른다. 2009년까지 국방부는 전사자 유해 발굴을 통해 총 4,133구(아군 3,380구, 적군 753구)의 유해와 80,467점의 유품을 발굴했다.

발굴은 대개 전사(戰史)를 통해 한국전쟁 중 격전지에 속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되거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는 제보 및 신고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보를 중심으로 발굴 계획이 세워지게 되는데, 2006년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 창설된 이후부터 모든 발굴 계획은 감식단에서 수립하고 있다. 발굴 대상은 '6 · 25전쟁 중 전사했거나 참전 중 실종된 군인, 군무원, 경찰과 경찰서장 혹은 국방부장관에 의해 참전을 인정받은 사람, 종군기자, 전시근로동원법에 의거해 동원되었던 자, '애국단체원'[8] 등이 포함된다.

발굴 과정은 사전조사 및 답사를 거쳐 발굴 지역을 선정한 후 개토제(開土祭)라는 의례를 거행하면서 본격적인 발굴에 들어간다. 개토제는 보통 발굴 지역 향토사단의 사단장이 중심이 되어 실시하며 발굴의 안전과 희생자 영령에 대한 추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토제 후 유해매장추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된다. 여기에는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의 전문 조사요원 및 지역 향토사단 병력이 투입된다. 유해 발굴은 층서적으로 제토를 실시하면서 고고학적인 원칙을 지켜가며 실시된다. 유해가 발굴되면 함께 발견되는 의복, 소지품, 총탄류 등을 기준으로 아군과 적군을 구분

8) 여기에서 말하는 '애국단체원'은 서북청년단 혹은 호림부대와 같은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준군사조직을 말한다.

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지고 유해의 체질인류학적 특성이 다양하여 아군과 적군의 구분이 용이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유해가 해부학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구분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 전사자 유해 발굴의 경우 피아 구분에 있어서 발굴된 유해의 소속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아군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박선주 2005, 165). 발굴 후 유해는 주변에서 함께 발견된 소지품 및 무기류 등에 의해 아군과 적군, 유엔군 등으로 분류한다. 아군으로 분류된 유해는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연고자를 찾는 작업이 진행되고,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유족에게 인도되거나 국립 현충원에 안장하게 된다. 또한 발굴 결과 인민군으로 확인된 유해는 인도적 절차에 의해 북한으로 인도되거나 파주의 '적군묘지'에 안장하게 되며, 유엔군일 경우에는 관련절차에 따라 해당국에 인도하게 된다.[9)]

전사자 유해 매장의 유형이 무명용사의 묘와 같은 형태에서 개인의 시신을 찾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국가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해를 '중앙으로 집중'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중앙으로 집중한다는 것은 발굴된 유해의 의미를 단일한 의미로 상징화하기 위해 한 곳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으로서, 발굴 유해의 의미를 국가주의로 단일하게 상정하거나 국립묘지와 같은 중심적 공간으로 집중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발굴된 유해는 현장에서 '호국영령'의 예를 갖추어 수습되며, 이후 유전자 감식 등의 절차를 거쳐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유가족에게 인수되거나 국립 현충원 등에 안장하게 된다.

---

9) 2010년 현재, 아직까지 북한으로 인도된 인민군 유해는 없으며, 간혹 미군 유해 등이 본국으로 송환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당시 미해군 보급장교로 전투에 참여했다가 행방불명되었던 로버트 랑웰의 유해가 2008년 국방부 유해 발굴단에 의해 발굴되어 미국으로 인도되었고, 이후 미국에서는 로버트 랑웰 소위의 영결식이 2010년 7월 12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거행되었다.

2)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

2008년 11월, 대한민국 서울의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의미의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이들의 대부분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유족회' 회원들로서, 가족이나 친척 중 일부가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학살되었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날 진실화해위원회에 모인 이유는 한국전쟁 당시 학살당했던 희생자들의 발굴 유해를 어떻게 보관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5년 12월,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진실화해위원회를 발족했고, 2007년부터 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전쟁을 전후해 학살되었던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진실화해위원회는 모두 1,617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2008년 발굴된 유해를 임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한 '유해임시안치소'[10] 건립을 기획하기에 이르렀다. 이날의 모임은 '유해임시안치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유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참석한 유족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유족들은 앞으로 건설될 임시안치소의 시설과 관련해 '편의시설의 증축'이라는 공통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각자 유족회의 처지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촌형님이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학살당한 경산유족회장은 자신의 지역에 위치한 '코발트 광산' 발굴이 계속되고, 이 발굴지가 역사교육의 장 혹은 기념관 형태로 변화하기를 고대했다. 반면 대전유족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자신의 아버지가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장지가 발굴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대전 지역 유해 매장지

---

10) 2010년 10월 현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발굴된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1,617구)는 충북대학교에 마련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추모관'에 안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영구안장이 아닌 임시안치 시설로서, 최초 안치 계약일은 2011년 7월 31일로 종료된다.

는 토지소유주와의 분쟁으로 발굴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과 달리 고양 유족회는 다른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고양지역은 1995년 유족회가 스스로 희생자들의 유해를 발굴했으나, 아직까지 발굴된 유해들은 안장되지 않고 한 대학의 시체해부실에 방치되어 있다.[11] 이에 대해 유족들은 유해들이 국가 추모시설에 안장되고, 발굴되었던 매장지는 역사 기념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듯 모임의 참석자들은 동일한 주제 속에서 다양한 생각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위의 사례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거사 정리'와 관련한 대표적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장면은 '과거사 정리' 가운데서도 가장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유해 발굴과 처리에 관련된 것들이다. 분단된 사회이며 아직까지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이 남아 있는 한국 사회에서, 수 년 전까지 '이적행위자'로 취급되었던 이들에 대한 국가적 유해 발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다.

한국전쟁은 전쟁의 규모에 있어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능가하는 큰 전쟁이었다. 전쟁은 남북한 내전으로 시작되어 급기야 미국, 소련, 중국 등의 동서 냉전의 대표 주자들이 모두 참여했고, 특히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은 UN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참여했다. 한국전쟁은 내전과 국제전이 결합되어 수많은 전사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대규모 비무장 민간인들의 희생을 야기했다. 한국의 일부 학자들이 한국전쟁기 학살된 민간인의 수를 백만 명까지 추산하고 있는 것은 피학살자 수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강정구 2003, 38). 한국전쟁 이후, 한국사회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 즉 희생된 이들의 대부분은 '좌익'으로 간

---

11) 1995년 고양금정굴 유족회 및 시민사회단체가 독자적으로 유해를 발굴하여 150여 구를 발견했다. 하지만 발굴 이후 유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나오지 않아 2010년 현재까지도 한 대학의 해부실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주되어 마땅히 처형되어야 할 사람들로 취급되었으며, 또한 '희생양'은 희생자에 국한되지 않고 그 가족들에까지 이어져, 희생자의 가족들이 연좌제 등으로 인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한국사회의 공고한 반공주의하에 가려져 있던 민간인 학살 문제는 1999년 '노근리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진실규명 찾기에 돌입하게 된다. 물론 한국사회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를 쟁점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80년대 민주화 투쟁과 1997년 김대중 정권의 출현 등 다양한 측면의 기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민간인 학살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유족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노근리 사건'의 파장과 커다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1999년 이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쟁점화는 이전 시기의 문제제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한국사회를 뒤흔들었을 때, 한국의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 역시 유족회를 조직하여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시도한 바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구체적인 입법 활동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1961년 발생한 군사쿠데타로 인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12] 그러나 1999년 이후의 활동은 연이은 진보정권의 수립과 사회적 공론화에 힘입어, 유족뿐만 아니라 진보적 학자 및 시민사회 단체 등이 결합되어 진상규명과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입법화를 시도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은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는 결과를 낳았고, 동년 12월에는 이 법에 기초해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국가기구가 출범하게 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출범 직후인 2005년 12월부터 한국전쟁 시기에 발생했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1년간 접수했고, 2006년 4월에는 신청된 사건에 대한 최초의 조사개시를 의결했다. 이

12) 당시 유족회의 많은 간부들은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구금되거나 투옥되었고, 유족회에서 발굴한 유해 및 기념물은 훼손되거나 파괴되었다.

과정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부터 민간인 학살 조사의 일환으로 학살이 발생했던 지역의 암매장지에 대한 발굴을 의결하여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유해 발굴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달리, 학살의 구체적 물증을 땅속에서 끄집어내어 과거의 사건과 담론, 기억 등을 재구성해내는 고도의 상징성을 가진 작업이다. 또한 발굴된 유해는 일종의 '상징화' 과정을 거치면서 향후 정치 · 이데올로기 부분에서 상당한 '물증'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성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초기에 유해 발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 사실이었다. 2007년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이 처음 실시되었을 때, 발굴의 근거는 전사자 유해 발굴과 같은 '국가의례'적 성격에 기초해 있지도 않았고 법률적 토대 역시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전사자 유해 발굴이 독자적 법률에 기초하여 '국가의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에 반해,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은 현재까지도 '살인사건 현장에서의 증거물 찾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13] 즉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은 사건조사의 보조수단으로 취급될 뿐 아직까지 국가의 종합적인 위령 사업으로 승화되지 못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진실화해위원회는 발굴의 초기 계획 수립 시 발굴 후 유해를 안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수 없었다. 즉 민간인들이 국가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으므로 조사를 하는 것

13) 현재까지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의 법적 토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3조 3항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6항에 의거하고 있다. 각각의 법 조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3조 3항: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 ·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시행령 제7조 6항: 위원회는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 과정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장 등 필요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위의 법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의 목표는 유해에 대한 위령이 아닌 조사를 위한 증거물 찾기이다.

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들이 '호국영령'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이 매년 10억 정도의 예산으로 약 4개소 정도의 암매장지를 발굴했다고 보았을 때, 2007년부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종료기간인 2010년까지 고작 10여 개소 남짓밖에 발굴할 수 없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객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초기부터 발굴 시행과 관련하여 열띤 논쟁을 벌였으며, 이 결과 2006년에는 발굴 예산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발굴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유해 발굴은 시작 초기부터 상당한 진통을 겪으며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07년부터 유해 발굴이 실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발굴을 바라는 유족들의 염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피해자 유족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사건이 종결되는 지점으로 사건 보고서의 작성을 꼽기보다는 유해 발굴을 희망했다. 많은 유족들은 60여 년 전 행방불명되었던 피학살자들의 유해를 찾아 제대로 안장하는 시점이 과거사 정리의 종료 시점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21세기 선진 한국'을 지향하는 시점에 도처에서 발견되는 방치된 피학살 유해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의 지탄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러한 측면 역시 유해 발굴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유해 발굴에 앞서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관련 암매장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지표조사는 2006년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실시되었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연관되었다고 추정되는 암매장지 169개소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총 169개소의 암매장지 가운데 발굴이 가능한 곳은 모두 59개소였다(진실화해위원회 2007). 발굴이 불가능한 곳은 학살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학살 이후 유해가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화하여 발굴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59개소 가운데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를 위해 발굴이 시급한 곳을 선정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유해 발굴에 착수했다.

2010년 현재까지 모두 13개소[14]에 대한 발굴이 완료되었고, 연도별로는 2007년 4개소, 2008년 5개소, 2009년 4개소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발굴지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암매장지였고, 모두 한국군 및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었다.

발굴은 진실화해위원회의 통제하에 여러 대학의 발굴팀이 시행했다. 이들은 고고학 및 체질인류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발굴을 실시했으며, 발굴된 유해들은 감식소에서 계측·비계측적 방법에 의한 감식을 통해 분류되었다. 하지만 유해 발굴은 2009년을 끝으로 2010년 현재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발굴이 종료된 표면적 이유는 유해 발굴을 담당했던 진실화해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된 것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보면 국가 차원에서 민간인 피학살자들의 유해를 궁극적인 위령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굴된 대부분의 피학살자 유해들은 안정적인 안장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채 2010년 현재 유해 임시안치소에 보관되어 있는 실정이다.

4. 근대성과 유해 발굴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전쟁과 같은 폭력상황에서 발생한 '비정상적 죽음 혹은 비참한 죽음'을 대상으로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유해 발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 유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 및 전쟁 실종자(전사자)들에 대한 발굴로서, 국가는 이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생

14) 발굴조사가 수행된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 경북 경산시 코발트광산(2007~2009년), 충북 청원군 분터골(2007~2008년), 대전시 동구 낭월동(2007년), 전남 구례군 봉성산(2007년), 전남 진도군 갈매기섬(2008년), 전남 순천시 매곡동(2008년), 경남 산청군 외공리(2008년), 경남 진주시 문산읍(2009년), 충남 공주시 상왕동(2009년), 전남 함평군 해보면(2009년).

략된 의례 절차의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비정상적 죽음을 정상화하는 국가의례를 수행한다. 발굴된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되며, 이들의 죽음은 국민국가(nation-state)가 모범적 선례로 제시한 죽음으로 인정된다(정호기 2005, 212). 즉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자들의 유해는 국가의 독점적 소유물로 취급되며, 국가는 이 유해를 처리하는 일종의 장의사(葬儀社)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권헌익 2003, 36).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0년부터 시작된 '6 · 25 전사자 유해 발굴'과 2010년에 시도하고자 했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시도 등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의 유해 발굴은 국가와 매개를 갖지만 첫 번째와는 성격이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발굴이다. 이 사례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국가폭력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맞은 후 오랜 시간 동안 국가의 공적 담론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국가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죽음에 대해 '장의사'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본격화된 과거청산 열기는 공적담론에서 외면되어 있던 수많은 국가폭력 사례들을 공식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5년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년부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에 대한 유해 발굴을 실시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본격적으로 '장의사' 역할을 수행했다.

국가는 동일한 시기의 '비참한 죽음'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유해 발굴이라는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 의도와 내용에서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전사자 유해 발굴은 누구나 주지할 수 있듯이, 안보와 호국의 기치 아래 실시되었다. 발굴된 유해들은 '국가를 위한 의로운 죽음'의 표상이 되었고, '국가성(nationality)'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죽은 자의 유해들은 깨끗하게 씻기어 '국가의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국가에 의해 수행되었고, 국가의 장의사 역할은 국민국가의 정체성 강화라는 근대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발굴된 전사자 유해의 생애사(life history)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든 모든 이야기는 국가중심주의로 귀결되고, 개인과 인간을 위한

위령이기보다는 '집단'과 '중앙성'을 강조하기 위한 죽음으로 포장된다. 전사자 유해 발굴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와 개인의 기억이 어떻게 동일하게 맞추어지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죽은 자의 몸 다루기'는 사실 근대성에 기인한 국민국가가 형성된 후 지금까지 꾸준하게 있어왔던 현상이기도 하다.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은 전사자 발굴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과거청산 과정에서 행해지는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의 일차적 목표는 과거 숨겨져 있던 사실(事實)을 폭로하고 이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살과 같은 과거청산 대상 사건은 대부분 국가공식 기록이 전무하다. 그러므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실재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구술사 등을 통한 증언들이 증거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가장 확실한 물증은 피학살자 및 실종자들의 유해를 찾는 것이다. 특히 민간인 집단 학살 발굴 현장은 일반 살인사건 및 무연고자 매장지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므로, 사건의 실재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의 효과는 유해를 찾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약 60여 년 동안 민간인 학살 사건은 공식 역사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암매장지에 대한 정보 역시 발설할 수 없는 '금기사항'이었다. 결국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수많은 담론들은 비공식적 역사로 떠돌거나 암매장지의 유해와 함께 묻혀 영원히 사장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 의해 실시된 피학살자 유해 발굴은 영원히 사장될 처지의 수많은 담론과 사실들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유해 발굴의 효과를 '역사적 기억회복운동'[15]이라 일컫고

15) 스페인에서는 2000년부터 (스페인)내전 혹은 그 직후 국민군(반란군) 진영 사람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 실종된 '강제실종자들'의 소재지와 집단 매장지를 발굴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 운동의 핵심은 실종자들의 매장지를 찾아 유해를 발굴한 후 새로 예를 갖추어 재매장해 주는 운동이다. 이 운동을 이끌고 있는 이들은 "역사적 기억회복협회(Asociacion

있다. 한국 역시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유해 발굴이 실시된 지역[16]에서는 망각된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회자되면서 새로운 담론들이 조성되었다. 그것은 전사자 유해 발굴과 같이 '중앙적'이고 '국가적'이지 않으면서, '지역적'이고 다소 '대항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했다. 그러므로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은 지금까지 호국영령과 근대 국민국가로 대변되는 '중앙성' 이외에 로컬리티(locality)[17] 및 근대성과 대비되는 대항담론 연구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사자 유해 발굴과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은 '사람의 뼈'라는 물증을 찾는 일이지만, 보다 확대 해석해 보면 뼈를 통해 자신들의 담론을 공식적 지위에 올려놓고자 노력하는 일종의 '기억전쟁'(최정기 2006, 4)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유해는 담론을 공식화하는 일종의 표상으로 작용하고, 죽은 자의 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어떤 표상보다 강력함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한편의 발굴은 공식적 지위로 인정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 대해서는 미묘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사실 국가가 국가폭력 및 전쟁에서의 민간인 피해자들을 본격적으로 위령하지 않고 있는 것

---

para la Recuperacion de la Memoria Historica; ARMH)"와 "기억 회복을 위한 사회적 운동(Movimiento social por la Recuperacion de la Memoria; MRH)"이라는 민간단체로서, 국가가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 2000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2002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발굴이 진행됨과 동시에 스페인 사회 내에 과거사 문제 혹은 내전 그리고 그 직후 벌어진 폭력과 탄압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크게 증폭시켰다.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과거의 망각에 대비하여 '역사적 기억회복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다. 즉 스페인 사회에서 집단 매장지의 발굴 문제가 그동안 잊혀져왔던 '과거 되살리기 운동', 즉 기억회복 운동을 촉발시켰다고 볼 수 있다(진실화해위원회 2009b, 36-37).

16) 본고에서는 역사적 기억회복운동의 사례를 유해 발굴이 실시된 지역으로 제한하여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움직임은 발굴이 실시되지 않더라도 민간인 학살 사건 조사가 진행되었던 곳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다.

17) 여기서 로컬리티는 '지역' 혹은 '지방'과 같은 중앙과 대비되는 특정지역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근대 국민국가가 추구하던 '중앙성'과 대비되는 모든 측면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은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 동일한 흐름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이후 과거청산 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민간인 실종자들에 대한 유해 발굴과 2000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스페인의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 1989년 이후부터 베트남에서 활성화된 베트남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대규모 이장 운동 모두 국가에 의해 실시되기 보다는 민간차원에서 활성화된 것들이었다.[18]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민간인 피학살자 및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유해 발굴이 국가 주도로 계속 지속되고 이들의 유해가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안장되지 못하는 이유는 근대성의 측면에서 볼 때 근대 국민국가의 중앙성에 대립하는 '대항담론'을 섣불리 공식적 지위로 이동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점을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전사자 유해 발굴과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이 근대성이라는 거대한 축을 중심으로 상호 대립하고 있으며, 근대 국민국가의 '장의사' 역할을 다른 축으로 확장하는 것이 '탈근대'라는 조금은 거대한 주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가차원의 위령은 현대에 이르러 그 성격에 있어서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근래 들어 국가의례가 국가를 위해 희생당한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 및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까지 포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국립묘지가 현충원 이외에도 '국립5 · 18민주묘지', '국립3 · 15민주묘지', '국립4 · 19민주묘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과거청산'

---

18)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국가 주도의 한국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은 대단히 특이한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국가 주도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에 대한 특이성은 논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차후 다른 공간에서 연구의 범위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

이라는 명목하에 과거 집단적 죽음을 양산했던 사건들이 조사되었고, 이후 이 사건들은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사례로 확정된 후 국가의례로 편입이 결정되거나 대기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의 대표적 사례로 '제주4 · 3사건', '거창 및 산청 함양 학살사건', '노근리 학살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이 사건들은 이미 추모공원 등의 구체적 위령 방법이 계획되고 있거나 시행된 사례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전체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중심적' 위령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하며, 이것의 구체적 징표는 민간인 학살 매장지에 대한 추가발굴과 발굴된 유해의 처리 방식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정구. 200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개관."『다 죽여라, 다 쓸어버려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6.『실미도사건 진상조사보고서』. 국방부.

권헌익. 2003. "전쟁과 민간신앙: 탈냉전시대의 월남 조상신과 잡신."『민족과 문화』12. 한양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_____. 2004. "전사자 유해와 현대사회."『2004년 6 · 25전사자 유해 발굴 보고서』. 육군본부 외.

김동춘. 2003.『전쟁과 사회』. 돌베개.

김성일. 2004. "6 · 25 전사자 유해 발굴 과정과 상징성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례. 1991. "제주무속: 폭력의 역사적 담론."『종교연구』4-1. 서강대학교 비교사상연구원.

노용석. 2005. “민간인학살을 통해 본 지역민의 국가인식과 국가권력의 형성.”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선주. 2005. “6 · 25 전사자유해발굴의 성과와 과제.”『2005년 6 · 25전사자 유해발굴 보고서』. 육군본부 외.

박찬승. 2000. “한국전쟁과 진도 동족마을 세등리의 비극.”『역사와 현실』38. 한국역사연구회.

송현동. 2005. “한국의 죽음의례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손호철. 1999.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 지형.”『한국과 국제정치』6. 한길사.

윤택림. 2003.『인류학자의 과거여행: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이용기. 2001. “마을에서의 한국전쟁 경험과 그 기억.”『역사문제연구』6. 역사문제연구소.

전쟁기념사업회. 1997.『전쟁기념관 건립사』.

정호기. 2005. “국민국가의 신성성과 ‘죽은자 모시기’.”『호남문화연구』36. 호남문화연구소.

진실화해위원회. 2007a.『유해 매장추정지 조사용역 최종보고서』.

_____. 2007b.『2007년 유해 발굴 보고서』.

_____. 2008.『2008년 유해 발굴 보고서』.

_____. 2009a.『2009년 유해 발굴 보고서』.

_____. 2009b.『피해 명예회복 및 화해 위령사업, 재단 해외사례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최정기. 2006. “과거청산에서의 기억전쟁과 이행기정의의 난점들.”『지역사회연구』14. 한국지역사회학회.

표인주 외. 2003.『전쟁과 사람들: 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 연구』. 한울아카데미.

Argentine Forensic Anthropology Team. *2007. 2007 Annual Report(covering the period January to December 2006).*

Equipo Argentino de Antropologia Forense. 2003. *Informe Mini Annual 2002.*

_____. 2006. *Informe Mini Annual 2005.*

Ferrándiz, Francisco. 2006. "The Return of Civil War Ghosts : The Ethnography of Exhumations in Contemporary Spain." *Anthropology Today,* Vol. 22, No. 3.

Fisher, J. 1989. *Mothers of the Disappeared.* Cambridge: South End Press.

Hertz, R. 1960. "A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collective representation of death." *Death and The Right Hand*(authored by R. Hertz and translated by C. Needham). New York: Routledge.

Informe de la Comisión Nacional sobre la Desaparición de Personas. 1984. *Nunca Más*, Buenos Aires: Editorial Universidad de Buenos Aires.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 1988. 송기도 역. 『눈까 마스: 아르헨티나 군부독재의 실상』. 서당.

Kwon, H. 2006. *After Massacre: Commemoration and Consolation in Ha My and My Lai*.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Richard van Dülmen. 2000. *Historische Anthropologie: Entwicklung, Probleme.* Aufgaben. 최용찬 역. 2001. 『역사인류학이란 무엇인가』. 푸른 역사.

Robben, A. C. G. M. 2000. "State Terror in the Netherworld: Disappearance and Reburial in Argentina." *Death, Mourning, and Burial.* Blackwell Publishing.

_____. 2004. "Death and Anthropology : An Introduction." *Death, Mourning, and Burial.* Blackwell Publishing.

Verdery, Katherine. 1999. *The Political Lives of Dead Bodies: Reburial and Postsocialist Change*. New York: Colombia University Press.

『중앙일보』.

투고: 2010.10.23 심사: 2010.11.10 확정: 2010.11.16